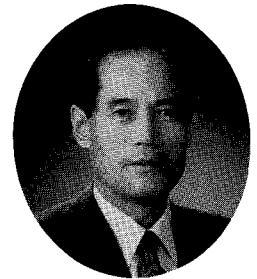


우리의 농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KCID 고문 이 중 기

우리나라의 농업은 50년대를 전후한 보릿고개의 탈피와 6-70년대의 식량주곡자급이라는 국민적 총체적 요구로 한국 경제의 주축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고성장 경제 정책에 따른 2,3차 산업의 팽창과 발달로 인하여 내리막길로 걷게 되었으며, 따라서 농업 노동력이 도시로 유출되는 등 농촌 인구의 감소와 농촌의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WTO 체제로 인한 농수산물의 수입시장 개방과 농어업의 제한적 보호 내지는 지원의 중단 등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가 진행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이를 해결할 행정적, 기술적 대책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울타리를 헐고 앞마당을 내줘야하는 오늘날, 선진국이나 후발 농업국을 막론하고 비상한 관심으로 WTO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국의 농업 생산 부분의 보호와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의 선조들이 농업을 보호하며 성장과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던 근대사의 자취를 살펴본다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나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철학 아래서 이조 태종 15년(1415년)에 벽골제의 수축과, 세종원년(1419년)의 놀제 수축, 구조물 관리 대장인 「제언대장(堤堰臺帳)」을 만들어 호조(戶曹)에서 관리케 하였다. 또한 경지정리의 시조라고도 볼 수 있는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였으며, 세조때에는 제언별감(堤堰別監)을 두어 댐 축조 현장에 공사감독을 파견하는 등 농업 생산기반조성 사업이 국방에 뒤지지 않는 비중을

두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세종 23년(1441년)에 발명한 측우기나 양수표(量水標)에 의한 유출량 측정은 근대 수문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농업생산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종 11년(1429년)에 일본에서 수입한 수차(水車:揚水機)의 공급과, 성종 20년(1489년)의 이말(李末)의 격수기(激水機) 고안을 들 수 있으며, 연산군 2년(1496년)에는 최보(崔溥)를 명나라에 파견 수차제도의 기술을 전수케 하였다. 이 외에도 김익경(金益慶, 1502년)이 고안한 수차, 박손(朴孫, 1546년)이 전습해 온 수차, 그리고 1700년대의 권탁(權倬)이 고안한 수차를 보급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제하에서는 조선산미증산이라는 미명하에 비록 식량강탈정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대아 콘크리트댐과 운암댐의 축조를 들 수 있으며, 이 때부터 수리 구조물의 형태와 공사 방법, 구조가 근대화 되었고, 아울러 조선증미계획으로 조선수리조합연합회가 설립(1904년)되어 비로소 관개배수시설 관리를 비롯하여 농지개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민단체가 탄생하였다.

광복후인 격동기에는 일제시대에 시행하던 사업의 마무리와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의 교육실시 등 질적·양적인 확충을 기하였다. 한때 6.25 전쟁으로 침체되기도 하였으나, 50년대에 UNKRA 원조 협정에 따라 1차 5개년 농업증산계획의 수립에 자금 지원을 받았고, 70년대 금강, 평택사업에 IBRD 차관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관개배수, 종자개량 사업을 주축으로 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였다. 이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80년대에는 제삼국으로 기술 용역을 수출하여 9개국 51개 지구에서 4,020만불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비교우위론에 의한 경제 정책에 따라 농업은 최하위로 물러서야 했고, 이와 아울러 기술의 발전도 제자리 걸음으로 오랜만에 주곡 자금을 이루었던 90년대를 정점으로 식량자급률이 다시 하강추세로 돌아서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더구나 경제 사회

발전의 여파로 우량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경지 면적도 '65년에 2,256천ha(100), '75년에는 2,240천ha(99.3), '85년에는 2,144천ha(95.0), '93년에는 2,033천ha(90.1)로서 30년 사이에 10%이상이 감소되었고, 경지 이용률도 157.8%에서 10.73%로 50.5%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생산면에서 다수확 품종개량과 관개배수를 주축으로 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에 힘입어 단위생산량이 ha당 2,89톤에서 4,59톤, 그리고 '93년에는 660만톤으로 35.5%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쌀의 자급율은 '90년을 정점으로 다시 하강하여 현재는 90% 내외에 머물러 있으나 앞으로 더욱 내려갈 전망이다.

또한 쌀의 재고는 '89년 1,029만석(100)에서 '94년에는 803만석(73.5), '95년에는 472만석(43.2), '96년에는 278만석(25.5)으로 낮아지고, FAO에서 권장하는 기본 비축량 500만석의 55.6%에 지나지 않으며 벼농사 재배면적 역시 '90년에 1,244천ha가 '95년 1,056천ha로 16.2%가 감소하였다.

WTO 출범에 따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시장 개방과 국내농업보조 감축등이 주골자로서 쌀수입 개방은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에 의거 현행 수입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소 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이라 하여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인 품목에 대하여는(선진국은 3.5%) 6년간(개발도상국은 10년간 일정 비율) 수입 개방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95년 1.0%인 5만톤을 '99년에는 2%인 10.0만톤, 2004년에 4%인 20.1만톤(142만석)을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95년에 수입한 5만톤의 인도 쌀의 미질이 문제가 되어 말짱이 있었고, '96년분인 중국으로부터의 쌀수입에 대하여도 농민들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생산기반 그리고 농민의 생활환경의 여건 변화는 이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도농간의 상대적 빈곤감과 열악성(劣樂性)은 농민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농어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 그리고 국가적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까지 42조원의 일반회계 예산과 15조원의 특별 목적세인 농특세를 신설, 총 57조원을 농어촌 발전 및 보호를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고, 농어촌 지역의 소득 향상을 포함한 생활환경 및 문화복지 시설에 이르기까지 정주 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0.4.7 법률 4228호)과 농어촌정비법('94.12.22 법률 제4823호)을 제정, 제도적 정착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농어촌 인구의 공동화를 막음으로써 농어업 노동 인력의 확보와 도시로의 인구 밀집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 하는 등 농어촌으로의 “유턴(U-Turn)”을 정착시키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의 생활 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끌어 올려 쾌적한 정주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정책을 계획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지는 않다. 늦게나마 신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한 일이며, 농업기술과 생산기반시설 확충 개선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내 고향 발전과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의 기술 역량을 모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합심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로서 울타리안의 앞마당을 남에게 내주지 않는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으며, 또한 우리의 기술 역량을 농정에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이를 우리 한국관개배수위원회의 모든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개선 및 기술 개발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